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보건복지 정책의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순서

I.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II. 최근 복지정책 환경

III. 보건복지 정책 방향

IV. 201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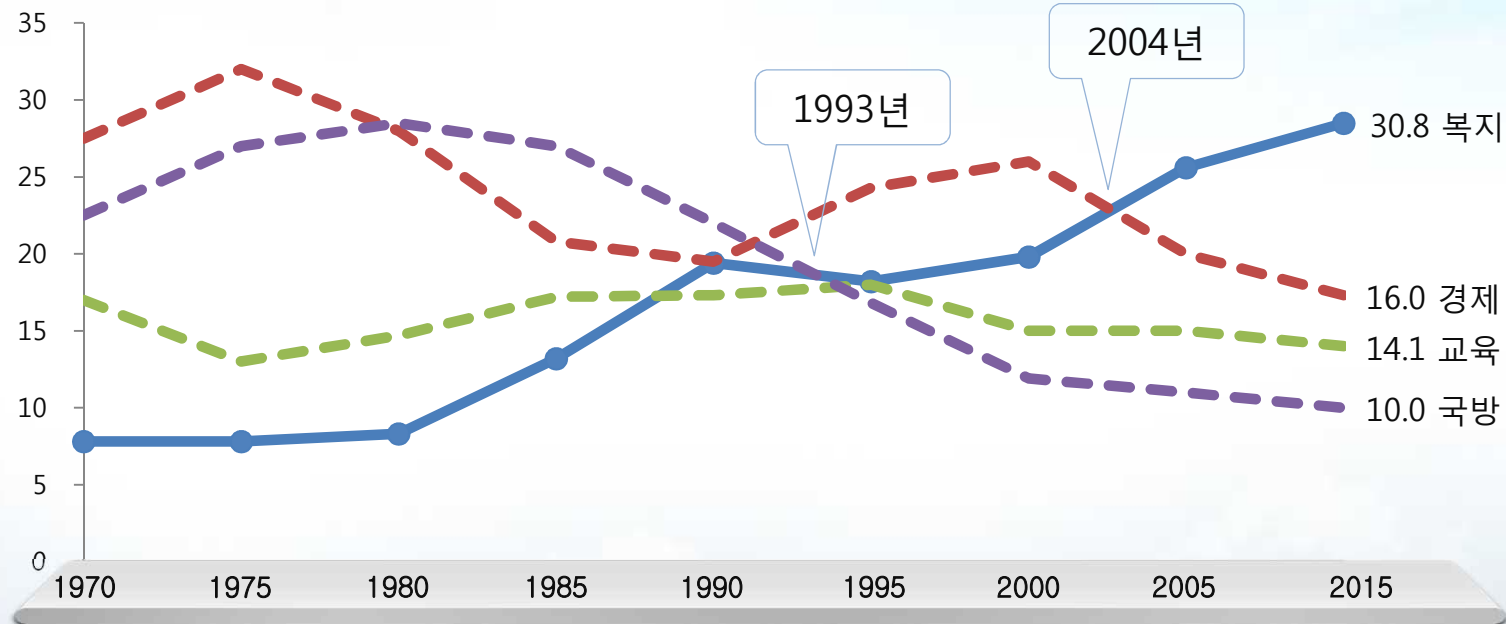
I.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1. 복지재정

복지예산은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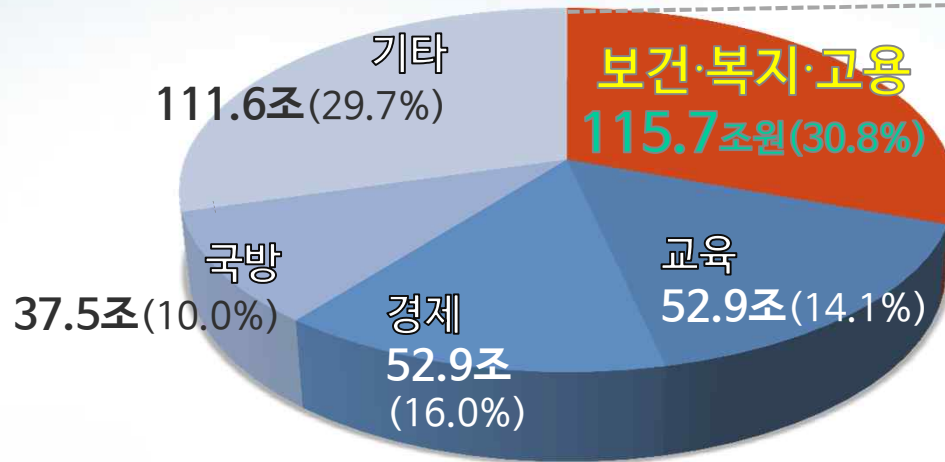
[%, 총예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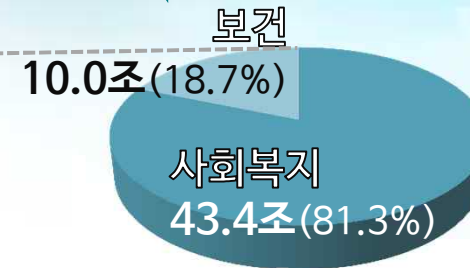
- 1993년 국방 추월, 2004년 경제 추월, 격차도 더욱 확대 추세
- 2015년 복지예산 115.7조원, 총예산의 30% 최초 돌파

(참고) 정부예산 12대 분야 자원배분

정부 전체



보건복지부



- 경제 : 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 기타 :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농림·수산·식품, 환경, 문화·체육·관광
- 보건 : 건강보험 (7.7조), 보건의료 (2.3조)
- 사회복지 : 공적연금 (17.2조), 기초생보 (9.5조), 노인 (8.8조), 취약계층 (2.1조), 보육 (5.0조), 기타 (0.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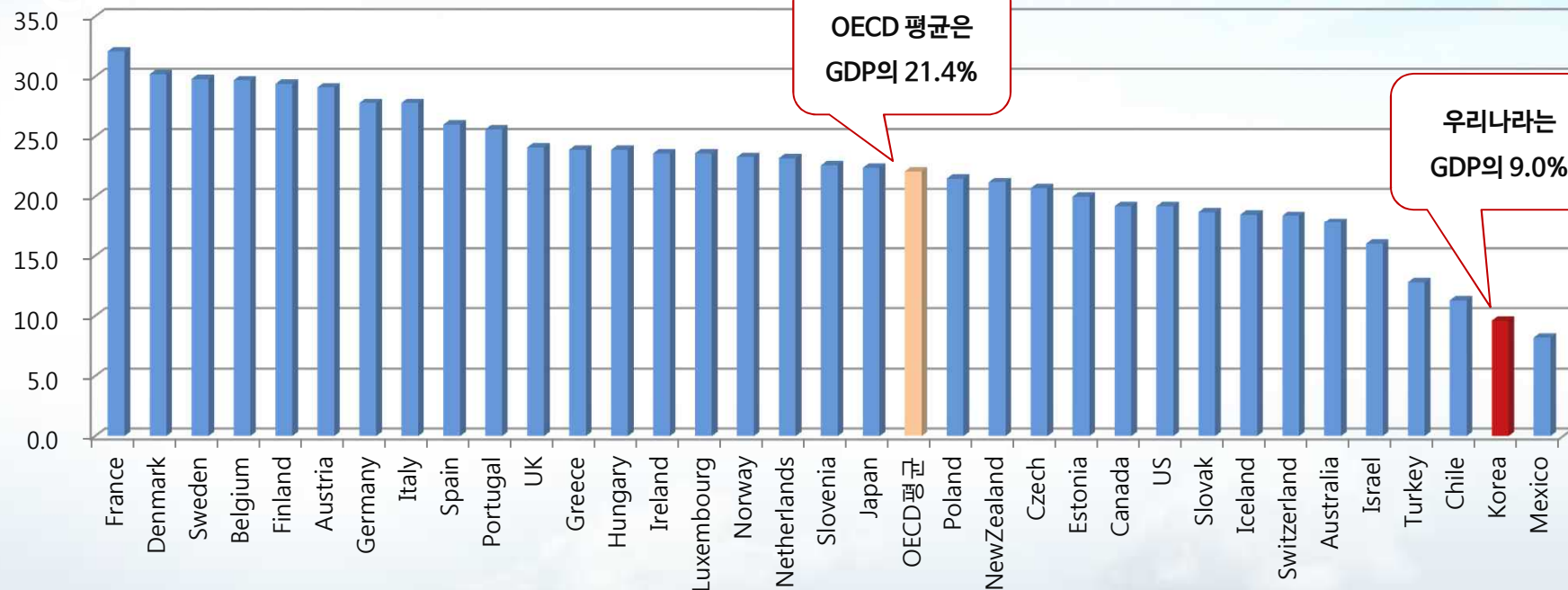
- 정부 총 예산은 **375.4조원**
-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15.7조원** (정부전체 30.8%)
-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53.5조원** (정부전체 14.3%)

1. 복지재정

GDP 대비 복지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 공공사회복지지출(OECD SOCX) >

단위 : GDP 대비, %, 2011



● 단순 비교시 **OECD 평균의 42%** (美의 1/2, 獨의 1/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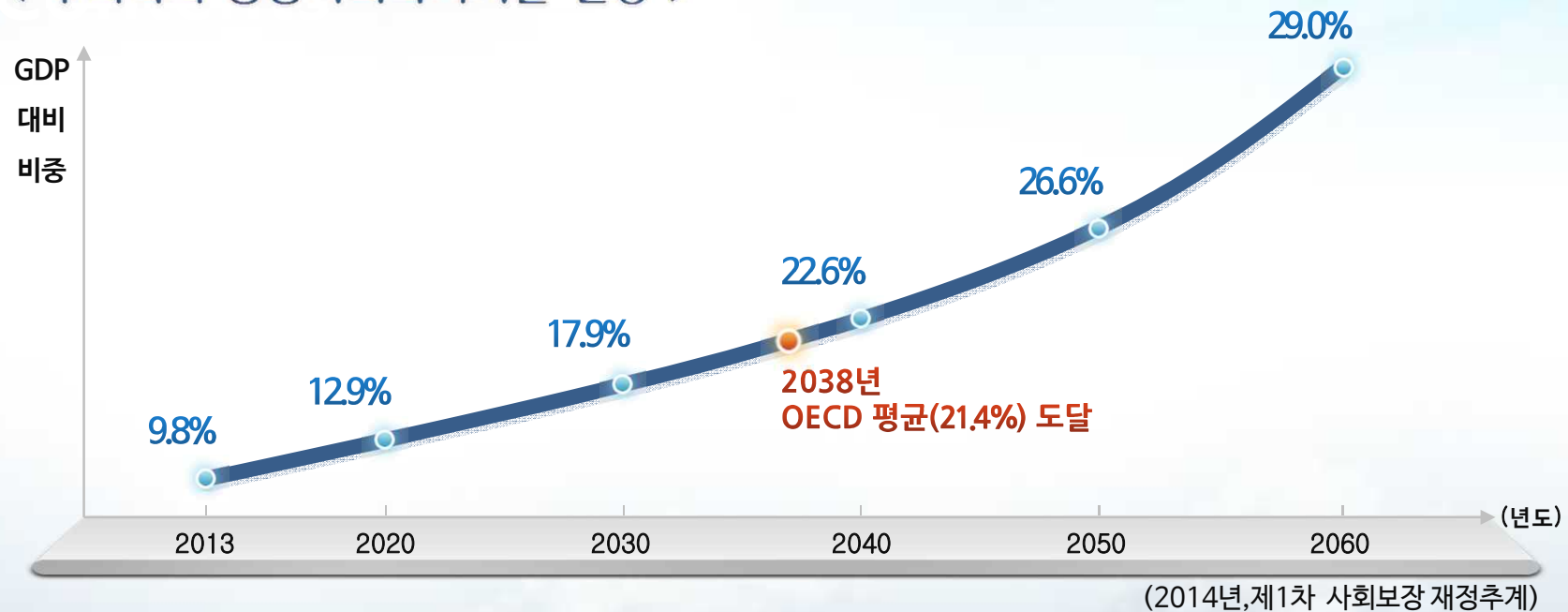
● 제도성숙도와 고령화율 고려시 **선진국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 연금제도 성숙도 반영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약 2%p 상승

1. 복지재정

그러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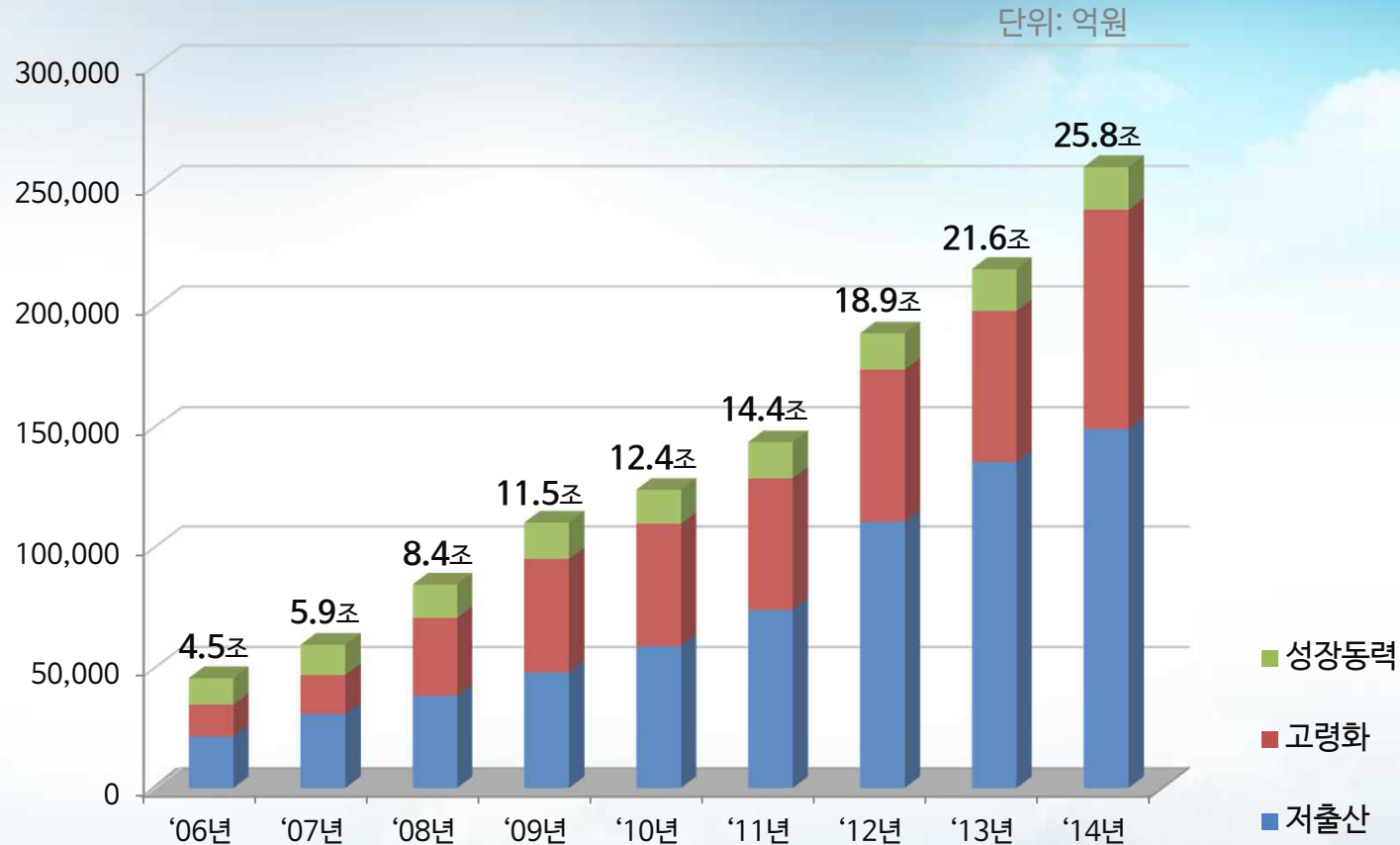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



- 현 추세 유지시 2033년 미국, 2038년 OECD 평균 수준 도달
- 복지지출 증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에 기인

* 고령화사회(7%) → 고령사회(14%) 도달기간 : 佛115년, 美73년, 獨40년, 日24년, 韓17년

(참고) 2006~14년 저출산·고령화 투자



- 지난 9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총 122.9조원 투입
- 저출산 66.6조, 고령화 43.2조, 성장동력 13.3조원 배분

2. 복지제도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비, 수혜자는 부족

1차 사회안전망

(5대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77년~, '89년 전국민 확대)
- 국민연금 ('88년~, '99년 전국민 확대)
- 산업재해보상보험 ('64년~, '00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고용보험 ('95년~,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2차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아동·장애인 돌봄 등 (전자바우처 '07년~)
- 긴급복지제도 ('06년~)

3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00년~)
- 의료급여제도 ('77년~)
- 기초노령연금 ('08~'14년), 기초연금 ('14년~)
- 장애인연금 ('10년~)

- 비교적 단기간에 대상별, 생애주기별 **각종 복지제도 도입**
- 다만, 사회보장제도 미성숙, 낮은 적용범위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미흡**

* 새로운 복지수요 및 국민 불안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

(참고) 지난 5년간 주요 변화

복지예산 (2011) 86.4조 → **(2015) 115.7조**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6%, 정부전체 5.0%)

대상자 (2011) 1,249만명 → (2013) 1,352만명 → **(2015) 1,604만명**

사회 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긴급복지 확대('09, '12)
- 장애인연금 도입('10)·확대('14)
- 행복e음 구축('10)
- 장애인 활동지원 도입('11)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11~'14, 7천명)
-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12)

국민 건강

-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12)
-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시행('12)
- 권역외상센터 도입('13)
-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13~'17)
- 3대 비급여 제도 개선('14~'17)
-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면무료('14)
- 담뱃값 인상('14)

저출산·고령화

- 제2차 기본계획 수립('10)
- 노후긴급자금 대부 시행('12)
- 5세 누리과정 도입('12)
- 0~5세 무상보육 실시('13)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14)
- 기초연금 도입('14)
-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14)

3. 복지정책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이행기로 접어드는 단계

< 복지국가의 유형 >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복지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로 **국민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시점

Ⅱ. 최근 복지정책 환경



1. 복지정책의 수요

왜 지금 복지인가?

서민·중산층 생활

- 경제구조 성숙으로 성장 둔화
- 자영업 · 서비스업 비중 증가
- 비정규직 · 저임금 근로자 증가

사회 결속력

- 세계 최고의 자살률
- 경제수준에 비해 낮은 행복도
- 복지욕구 분출과 이해 갈등

인구 및 가족구조

- 최저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 여성경제활동 증가

복지 = 서민생활안정 + 사회통합 + 미래성장동력

1. 복지정책의 수요

경제성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기제 약화

경제규모 대비 낮은 행복도

OECD
10위

국민총소득
(GDP) 순위

더 나은 삶 지표
(Better Life Index) 순위

OECD
27위

2013년, OECD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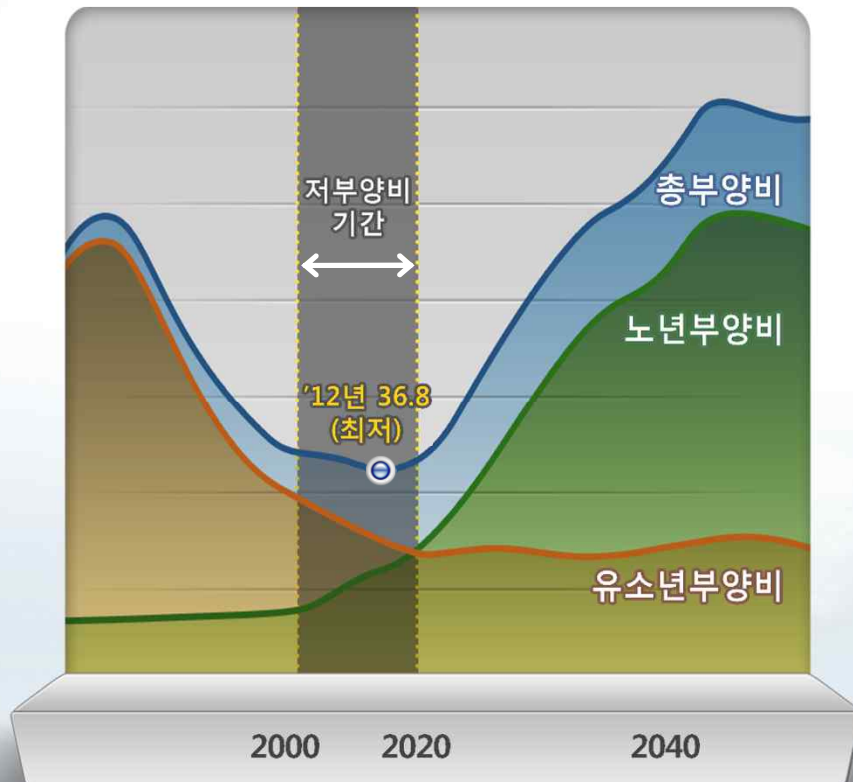


중위임금 2/3 미만 고용 비중 (% , 2010년, OECD)

1. 복지정책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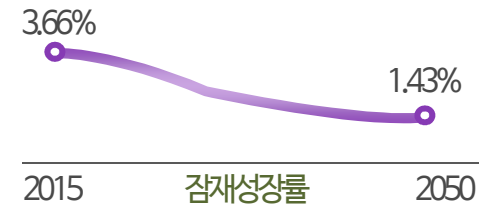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동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



저출산·고령화의 파급영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잠재성장률 하락



○ 노인인구 증가 → 지속가능성 위기

-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환('21)
- 군 병력 8.4 만명 부족('30)
- 건강보험 적자 47.7조원('30)
- 국민연금 적립금 수지적자('44)

○ 사회구조 변화 → 교육, 주택, 국방, 금융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구조적 영향

2. 복지국가의 딜레마



해결에 실패할 경우

성장동력 악화, 사회통합 지연,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국가, 가족, 기업, 사회, 국민 모두에 악영향

3. 복지와 성장의 선 순환

복지는 경제성장 기반에서 가능

-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 **재정** 뒷받침 없이는 지속 불가능



지속성장은 복지발전 속에서 가능

- **사회안전망**으로 경제활동 촉진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 **인적자본 투자**로 시장 보완 (보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 (예) 아동복지지출 1달러 = 사회편익 7.16달러

4. 최근 선진국 동향

PIGS 국가 재정위기

- 저성장 & 세수기반 취약
- 복지지출 과다
- 대외수지 불균형 조절기능 약화

➡ **저부담 · 고복지**는 지속 불가능

일본, 침체된 은퇴대국

- 생산가능인구 1998년부터 감소
- 높은 국가채무비율 & 저성장 지속
-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부담

➡ **고령사회의 사회像** 암시

선진국의 복지개혁 동향

- **영국(1) : 복지정책 개혁안 발표** ('12.6월)
 - * 복지급여수준 총액 제한
 - * 수급조건으로 근로 의무 강화 등
- **프랑스 : 연금개혁** ('10.10월)
 - * 정년상향, 연금수급연령 연장, 납입기간 연장
 - * 전국적으로 연금개혁 반대시위 촉발
- **스웨덴 : 레인펠트 복지개혁** ('06~'14년)
 - * '일하는 스웨덴' 캐치프레이즈
 - * 과도한 실업수당 일부 개선 등
- **영국(2) : 민간 자원 활용강화** ('12.8월)
 - * 저소득층 생계유지 지원 예산 삭감
 - * 민간 비영리기관(푸드뱅크) 역할 확대

Ⅲ. 보건복지 정책 방향



1. 문제인식

현행 복지제도 및 전달체계의 한계

복지제도 문제

- 현행 제도는 **서구 복지국가모델 지향**
 - 과거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설계
(정규직 남성근로자, 현금급여 중심)
- **21세기 정책환경과 부조화**
 - 비정규직,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
 - 이에 따라 선진국도 복지개혁 중
-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불충분**

전달체계 문제

- **단기간에** 선진국 주요 제도를 도입
 - 복지예산도 빠르게 증가
- 그러나, **각개약진(各個躍進)식 확대**
 - 부문별, 제도별 분절
- **국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낮은 구조**
 - 단순한 양적 확대는 지속 불가능
(비효율 누적 + 국민 조세저항)

2. 한국형 복지국가의 비전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14.8월)

핵심 가치

[**맞춤형 고용-복지**]

사회보장체계의 운영원칙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균형

세대간, 계층간
부담의
형평성 확보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의
공정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핵심 전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세대 지원 (임신·출산, 양육, 아동 등)
- 가계부담 경감 (의료, 주거, 생활비)
- 노후생활 보장 (소득, 건강, 안전, 사회참여)
- 맞춤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가족)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청년, 여성, 중장년, 근로빈곤층의
고용-복지 연계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 효율적 제도운영, 정보시스템, 재정 안정
-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 보건복지 정책 체계도

비전

국민 행복

목표

생애 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책임

주요
과제

-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시 국민편의 제고
-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 복지재정 관리 강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모든 아동이 행복할 여건 조성
- 보육지원 내실화
-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강화
- 노후소득 보장 강화

IV. 2015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1.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3.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1.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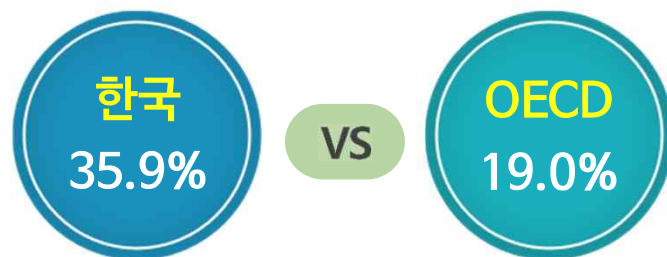
환자의 높은 비용부담

✓ 보장성 강화해도 환자부담 여전

	2006년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	64.5%	63.0%
비급여 본인부담	13.4%	17.2%

- 여성(54.2%), 청장년층(56.6%) 등 성·연령별 보장성 격차 발생

✓ 국민의료비 중 높은 개인부담률('12)



만성질환자 증가

고혈압 환자 수



당뇨병 환자 수



✓ 평균수명 81.3세 vs 건강수명 70.7세('11)

1. 생애맞춤형 건강사회 실현

열악한 공공의료 인프라

필수의료서비스 부족

병원이 1개 이하인 시군구	36개
분만산부인과 없는 시군구	46개
응급의학전문의 없는 군	45개

10만명당 응급전문의수



보건산업의 유망성

보건산업 세계시장



타산업 세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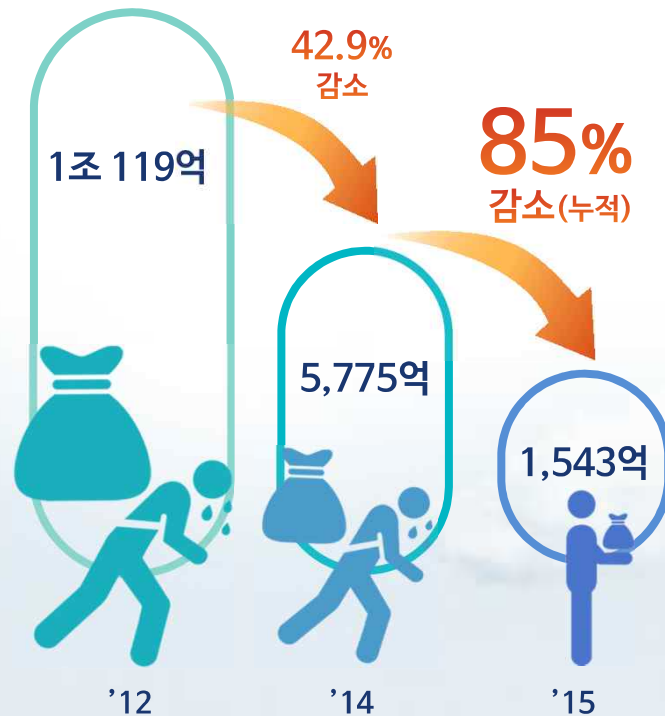


삼성전자 165조 매출, 16만명 고용 vs 아산병원 1조, 1만명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 전면 보험 적용

비급여 환자 부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15년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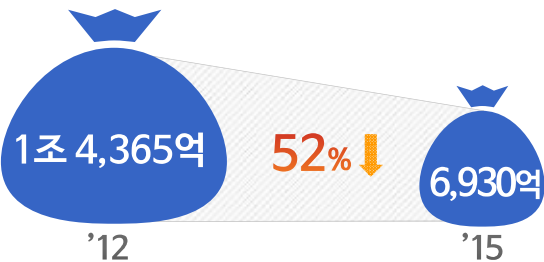
- 고가 항암제 ·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
203항목 급여 확대
* 방사선 치료, 유방재건술, 암환자 유전자검사,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산정특례 대상 확대**
 - 급성기 중증 뇌혈관·심장질환자 특례 확대
 - **극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 **희귀질환자의 포괄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마련**
 - 희귀의약품, 임상연구 단계 의약품, 특수 치료재료 등 사용에 따른 의료비 경감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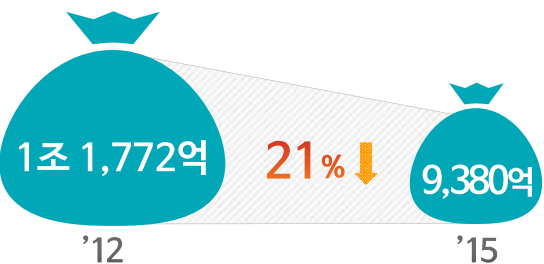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부담 완화

3대 비급여 환자 부담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개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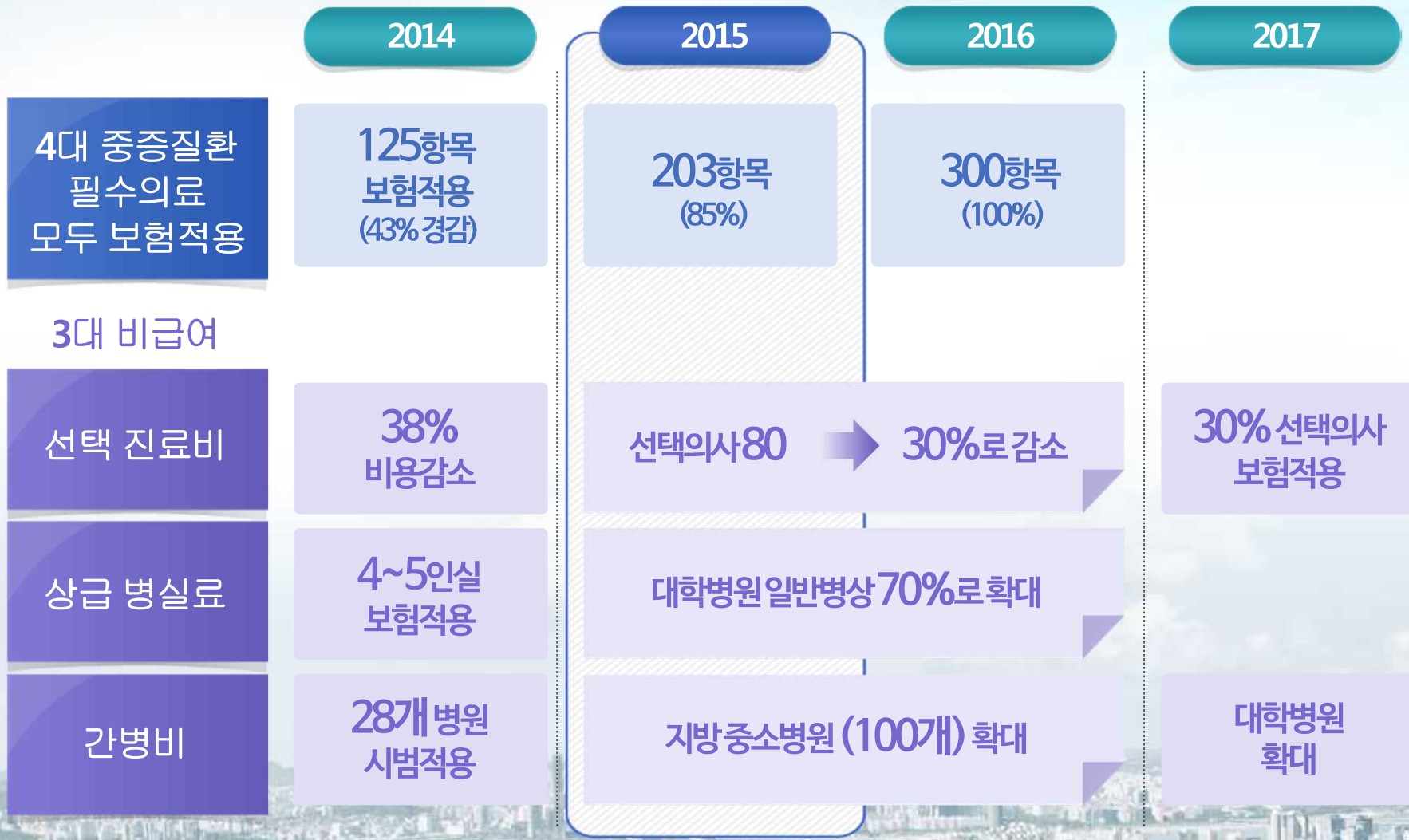


'15년 추진 계획

- **선택의사 비율 조정** (80→65%)
 - * 선택의사수 감소 (10,387→8,125명) 예상
 - ➡ **우수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 **상급종합 일반병상 의무비율 조정** (50→70%)
 - * 일반병상 증가 (29,755→30,595개) 예상
 - ➡ **저수익·저공급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 **포괄간호서비스 지방중소병원 확대** (100개)
 - * 간병부담 감소 (7일, 56만→3.9만원) 예상
 - ➡ **포괄간호 수가 건강보험 적용**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17년까지 제도 개선 차질없이 이행



1-1.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생애주기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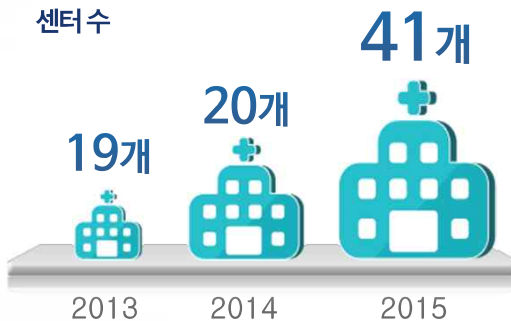
	임신·출산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년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산모 부담 경감 임신성 당뇨병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아당뇨 영유아 A형간염 무료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연치료 고혈압, 당뇨 등 통합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스피스 완화의료 독감예방 무료접종
2016~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 집중치료 선천성기형 진단·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치치료 정신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비만 정신질환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검사·치료 임플란트(65세)

건강보험 중기('14~'18)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15.2월)

1-2. 의료이용시 국민편의 제고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권역응급센터



- **권역응급센터 확충 확대(20→41개소)**

*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1h)내 도달

- **센터 인력·장비 보강, 응급수가 개선, 현장 응급차량 배치**

응급인프라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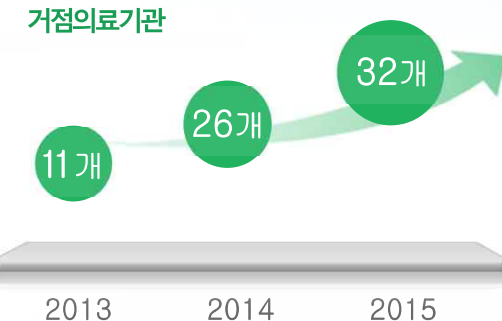


- **응급실 위탁운영 및 닥터헬기(4→6개)**

- **권역외상센터 확충(12→14개소)**

* 24h 응급수술 가능한 중증외상 치료시설 (17년 17개소 설치)

의료취약지 해소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대**

* 분만 12, 외래 13, 순회진료 5, 소아 2('15)

- **지역거점 공공병원(38개소) 시설·장비 보강 지원**

1-2. 의료이용시 국민편의 제고

원격의료 · 응급협진 본격 도입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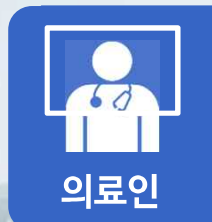
- 참여기관 확대 (9 → 50개)
- 마을회관 · 경로당 등 활용

부처간 협업을 통한 확산



- | | |
|-----|-----------------|
| 국방부 | 격오지 부대 등 (50개소) |
| 해수부 | 원양선박 (5척 시범사업) |
| 법무부 | 교정시설 (27 → 29개) |

의료인간 원격협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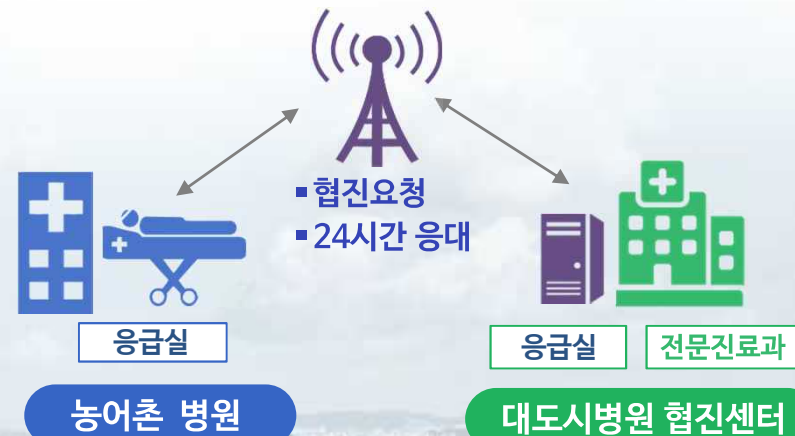


- 대도시 거점병원-취약지 응급실
※ 광주 - 전남 모델 전국 확산
- 대형병원-의원간 원격협진

원양선박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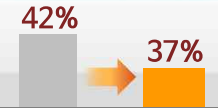


응급실 협진 모델



1-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성인남성 흡연율 5%p 감소 목표



맞춤형
금연지원

- 담뭇값 인상·강력한 비가격정책·금연치료 등 **금연 종합대책 발표**(‘14.9월)
- 건강증진부담금 비중 확대 (14.2→18.7%)
- 확보된 재원은 금연치료, 흡연예방 등 흡연자 지원에 활용

가격 정책

» 담뭇값 **2,000원 인상** (‘15.1.1)

건강증진부담금 354→841원



비가격 정책

» 담뭇값 **경고그림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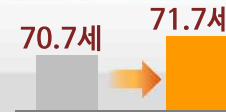
» 모든 음식점(‘15.1.1), 당구장 등 **금연구역 확대**

» 금연 **공익광고·캠페인 확대**

» 신종담배 **건강위해성 교육·홍보**

1-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건강수명 1세 연장 목표



맞춤형 금연지원

- 담뭍값 인상·강력한 비가격정책·금연치료 등 **금연 종합대책 발표**(‘14.9월)
- 건강증진부담금 비중 확대 (14.2→18.7%)
- 확보되는 재원은 금연치료, 흡연예방 등 흡연자 지원에 활용



건강생활 실천 지원

-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 확대
※ 학교, 아파트, 경로당 건강사업 확대
- 공공장소 음주·주류 판매 금지
- 근로자 건강센터 확충 (15→20개)



만성질환 예방·관리

- 여성, 고위험군 **암 검진** 확대
※ 자궁경부암, 간암
-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치료 연계
- 동네의원 고혈압·당뇨 관리 강화



신종감염병 예방

- 에볼라 등 감염병 **국제공조** 강화
※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9월)
- 고위험병원체 실험실 가동 (11월)

1-4.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보건의료의 세계진출 가속화

해외환자 유치 (25만 → 32만명)

- 환자 '유치 · 서비스 · 후속진료' 전주기 지원
-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시장 건전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125 → 136개)

- '병원진출 + 정보시스템 + 제약등' 패키지 수출
- 정책펀드 조성 (4천억원) 및 의료면허 인정 간소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조기입법화 및 자법인 설립 확대

‘Medical Korea-Premium Total Care’

유치

- ◉ 국제진료비 · 병동 · 통역사등 정보공개
- ◉ 중국 미용 · 성형 유치시장 건전화에 집중

의료+관광

- ◉ ‘국제환자지원센터’ 설립 (*16)
* 중동센터 확대, 원스톱 서비스
- ◉ 의료법인의 메디텔, 여행 · 관광업 수행

후속진료

- ◉ 해외환자 사전 · 사후관리 센터 설치 (Pre-Post Care Center)
* 치료 전후 서비스로 신뢰도 제고

1-4.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지원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 유전체·줄기세포 등 투자 확대 (3년간 400억원)
- 연구중심병원 투자 확대 (100억→170억원)
- R&D 전략회의를 통한 성과지향적 관리 강화

의약품 · 의료기기 글로벌화 지원

-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 운영 (6월)
- 제약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신흥국 G2G 협력으로 인허가 간소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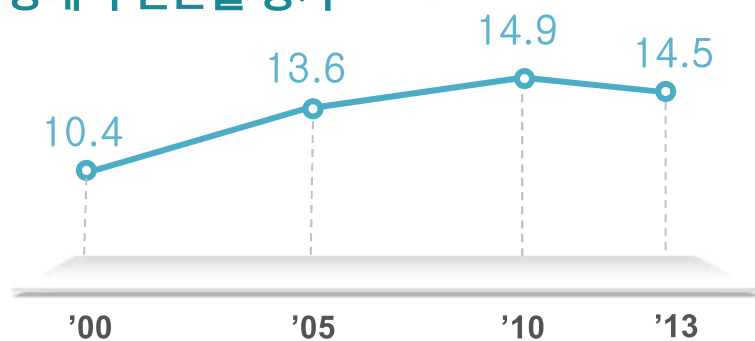
첨단제품 임상 · 연구 기반 강화 및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보건의료 세계화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 **3.8만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6조원** 달성

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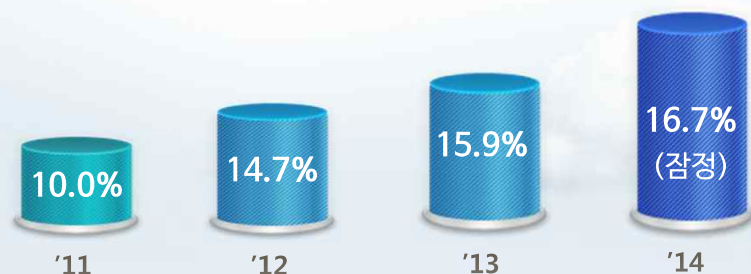
저소득층

✓ 상대적 빈곤율 증가



* 통계청 (도시 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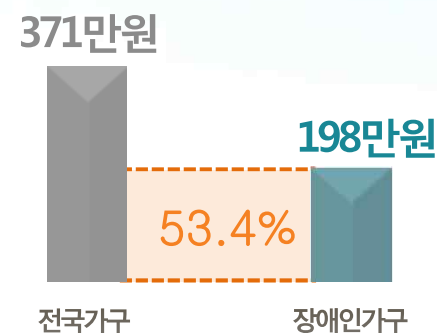
✓ 여전히 낮은 탈수급률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장애인

✓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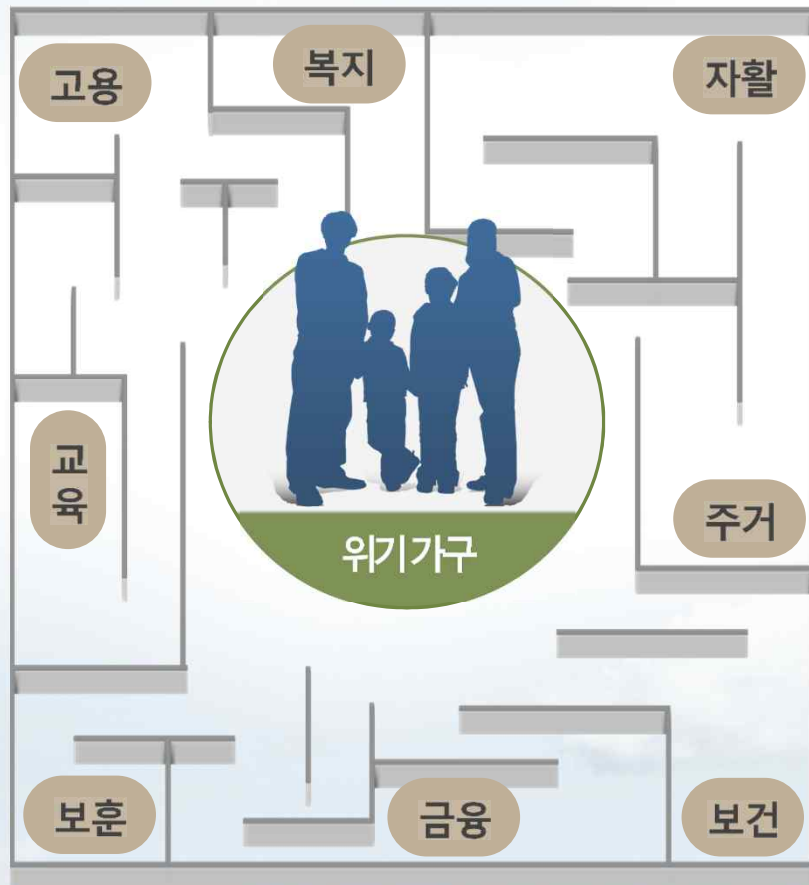
✓ 발달장애인의 인권문제 발생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2.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보장

칸막이로 인한 국민불편과 낮은 체감도



복지깎때기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 복지사업 증가 / 기준 복잡
- 복지인력 부족
- 국민들은 통합서비스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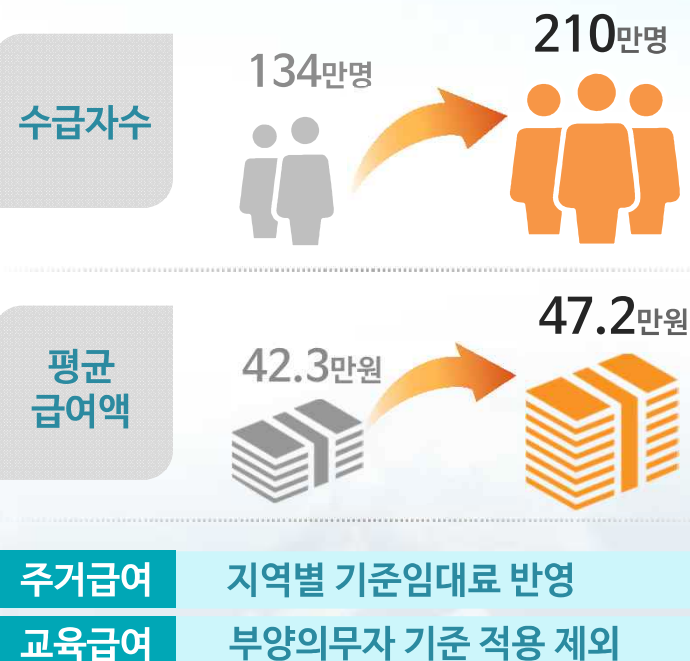
2-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차질없는 시행

맞춤형 급여로 개선



지원 확대



3월
하위법령 개정

3~5월
복지공무원
재배치·교육

6월
전산시스템
구축

7월 20일
첫 급여 지급

2-1.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제 시범사업

- 의학적 기준외 **장애인육구** 등을 고려하도록 설계

발달장애인법 시행('15.11월)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 **통합센터** 및 하위법령 마련

수요 기반의
정책으로 전환

중증장애인 돌봄

- 활동지원 대상 **장애 3급**까지 확대 (575백명)
- **응급안전서비스** 확대 (76백명)

생활 편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하위법령 제정 (국토부와 공동부령)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지원 강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 '복지로' 포털, 129 콜센터 활성화

- 본인 또는 이웃 신청, 온라인 상담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전국확대

- 복지 통·이장 (9.4만명), 좋은이웃들 (2만명)
- 읍면동 민관협의체 (8만명)

» 위기가구 주기적 모니터링

- 단전·단수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필요한 도움을 빈틈없이 지원

» 복지서비스 + 일자리 연계 강화

- 고용 복지+ 센터 확대, 정보연계 강화
- 기초수급자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 현장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지원

- 일시적 위기: 긴급복지 2배 확대 (15.6만건)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98만 가구)

» 다양한 민간자원 확충·연계

- 기금은행, 기부연금(나눔기본법 제정) 도입
- 공동모금회, 종교단체, 지역기업 등



사회서비스 단일카드 통합 (국민행복카드)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중앙) 사회보장정책 총괄·조정 강화

통합 · 연계 강화

- 수요자 중심 사업 연계
- 맞춤형 통합서비스 설계

복지사업 표준화

- 선정기준 단순화
- 국민이 알기 쉬운 서비스

사회보장 위원회

사회보장 재정 · 통계

- 중장기 재정추계 실시
- 사회보장 통계 체계적 관리

위원장 : 국무총리

12개 관계부처 참석

중복 · 누락방지

- 신설 · 변경사업 협의 · 조정
- 유사 · 중복사업 정비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4~'18) 시행('14.8)

(참고)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체계도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안정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고용-복지 연계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지역) 주민센터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2-2.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

(민간) 나눔의 사회적 실천 확산 및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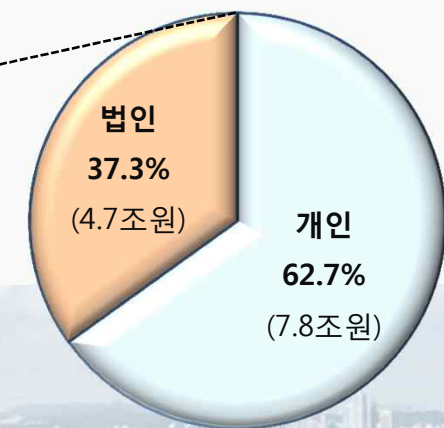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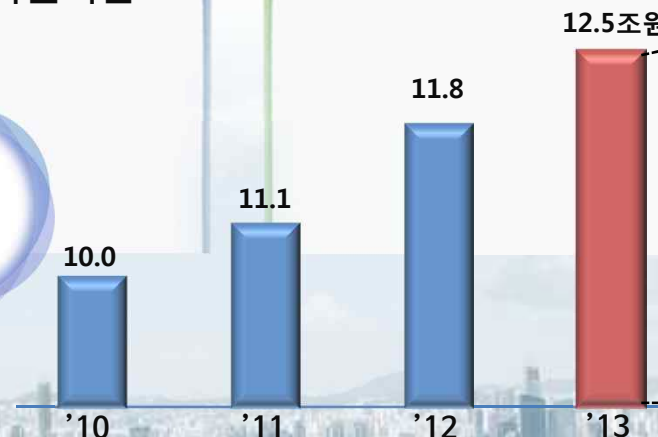
제도적 기반 강화

- **나눔기본법** 제정 및 **기부연금** 도입 추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15.하)
- 나눔실태 2014 발표(4월)
- 효율성 · 투명성을 평가하는 중간지원기관 도입 검토

나눔저변 확대

- 사회공헌 종합정보 제공
- 기업-정부, 기업-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 사회공헌 인력 역량 강화

기부금
추이



2-3. 복지재정 관리 강화



복지재정 낭비 및 유사·중복 방지

복지재정 누수 방지

국민신고 상설화	시스템으로 원천 차단	현장조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로’ 포털 익명 신고 신설 ▪ 신고 포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사실 공유 강화 (13 → 17개 기관 연계) ▪ 지자체 조사주기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확대 및 전담조직 가동 ▪ 허위청구병원 특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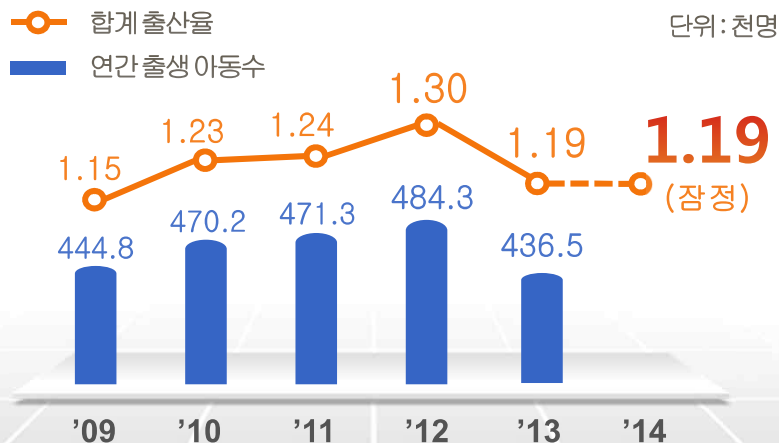


유사·중복사업 정비 (사회보장위원회)

	정비방향	정비안 마련 (2~4월)	적용 (5~12월)
중앙사업 (36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통폐합 • 전달체계 통합 • 서비스연계 	제도조정소위 실태분석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부처별 실행  '16년 예산 반영
지방사업	실태조사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6월) → 지자체 이행 → 평가·지원 연계		

3.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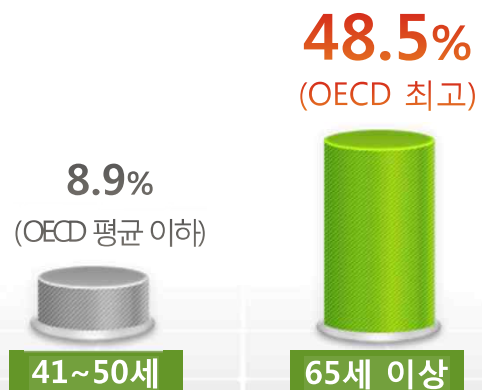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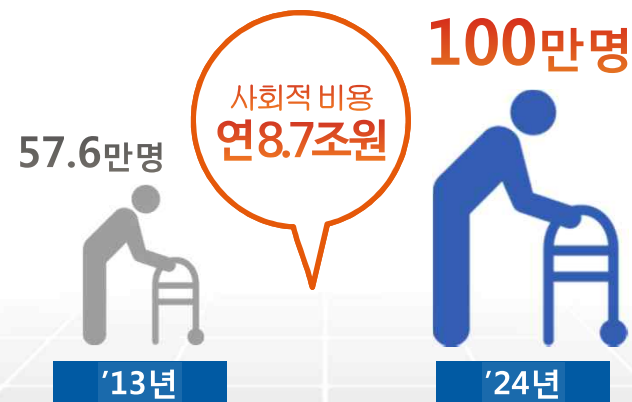
아동의 삶의 만족도 ('14)



노인빈곤율 ('12)



치매노인 증가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천만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수립

4대 분야 정부-민간 공동분과위원회



- 정책대상별현장의견 청취및 토론 (3,7월)
- 지역사회정책제안대회 (3월)

- 릴레이정책간담회 (여성, 경제, 노동, 종교, 교육, 언론계등)
- 5천만이함께만드는 온라인 소통창구운영 (2월~)

3월

과제확정

5월

초안 작성

6월

시안마련

7월

중간보고 · 공청회

9월

기본계획 확정

3-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저출산 추세 반전

목표

고령사회 연착륙

» 합계출산율('20) 1.4명 달성

» 경제성장률 3%대 유지

만혼추세
완화

맛벌이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지원 강화

경제활동
인구 확대

노후생활
안정

실버 경제
육성

3-2. 모든 아동이 행복할 여건 조성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범정부 지원 강화

임신 · 양육 부담 완화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단가 인상**
(180만→190만원)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10월, 45천명)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7월, 9천명)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 12~36개월 **소아 A형 2회 무료접종 시행**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 **적정 서비스 · 인력기준, 공공 산후조리원 등 정책방향 마련**
- 산후조리원 **안전 · 감염관리 종합대책 수립**
* 층수 제한(2층 이하),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등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 아동기념일과 연계, 아동관련 공익캠페인 전개
* 어린이날, 입양의날, 세계아동의 날 등

3-3. 보육지원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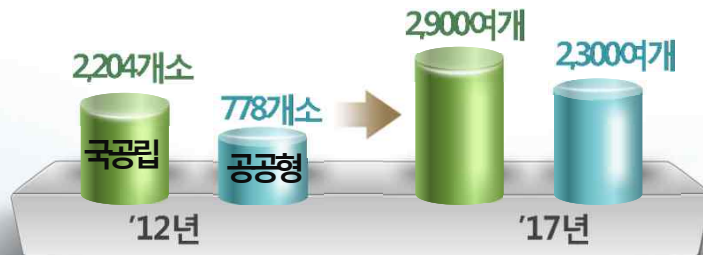
양적확대에서 질 높은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

믿을 수 있고 질 높은 환경

✓ 어린이집 평가인증 내실화

* 수요자 중심 평가, 평가등급제 도입 등

✓ 국공립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 기업 기부채납 활성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등 병행추진

✓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

* 소방 등 안전정보 공시 강화, 안전컨설팅 도입 등

실수요 중심 맞춤형 지원

✓ 가정양육을 보완하는 시간제 보육 확대

* 97개 → 230개소

✓ 다양한 시간대(야간, 휴일 등) 보육서비스 확대

* 국공립 · 공공형 중심 시간연장 보육, 24h 보육 등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개선

* 아동별 신청 개소수 상한 설정, 입소아동의 타 어린이집 대기신청 자동삭제 등

3-3. 보육지원 내실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수립 · 이행

아동학대 강력처벌

- 학대발생 **‘즉시’** 시설 폐쇄 · 행위자 자격정지
- 학대 교사 · 원장 **영구퇴출**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신고포상금 강화 등)
-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경찰청 협조)

CCTV 등 안전장치 확충

-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
- 정보공시 강화 (학대예방교육, CCTV 설치 여부)

부모참여 활성화

- **평가인증**시 부모참여 강화
- 부모에게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
- 아동학대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자격요건 대폭강화

- 교사양성체계 강화 (실습·대면학습 등)
- 보조교사 · 대체교사 확충
- 보육교사 대상 정서·심리상담 제공

3-4.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강화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노인 건강 지원

틀니 · 임플란트 (7월)

75→70세 이상 보험확대
(263만 → 450만명)

독감 (10월)

65세 이상 무료접종
(470만 → 540만명)

인공무릎관절 수술 (7월)

65세 이상 수술비 지원
(1,900명)

치매예방 및 지원 강화

치매예방 실천

- 중장년까지 수칙(333) 홍보강화
- 복지관, 요양시설 등 운동법 확산

치매 전문시설 확대

- 요양시설 치매 전담실 운영
-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 가족상담 전문서비스 제공

‘제3차 치매관리기본계획’ 수립 (’15.9월)

3-5.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돌봄 강화

사회 참여

- 일자리 31만 → **34만개**
- 취업 · 창업 지원
- 취약노인 돌봄 참여
- 자원봉사 · 재능나눔 지원



Active aging

독거 노인

- (공공) 안부 · 안전확인
- (민간) 기업 결원 · 후원

→ **45만명 보호**

(소외된 독거노인의 75%)

학대 노인

- **학대노인 전문양로시설**
지정 · 운영('15.3월)
- **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3-5. 노후소득 보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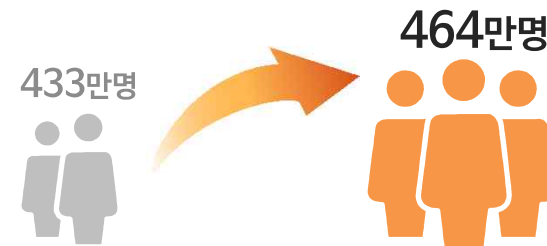
현세대 · 노인세대 모두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기초연금

필요한 어르신께 빠짐없이 지원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재 신청 없이**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기금 500조 시대에 걸맞은 관리운영체계 마련

기금운용의 **전문성 · 독립성 · 책임성** 강화

➡ **국민 신뢰 및 지속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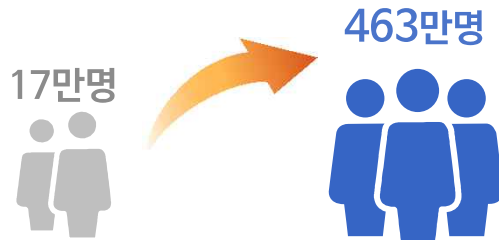


3-5.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일하다 그만둔 주부

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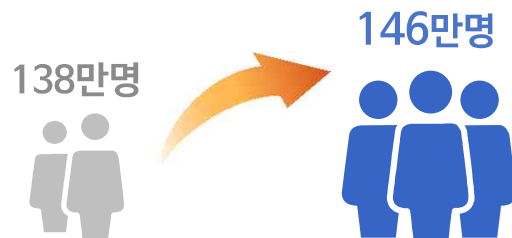
실직한 사람 (실업크레딧)

월 보험료 최대 5만원 지원



저소득 근로자

월 보험료 최대 6.3만원 지원



시간제 근로자

복수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시,



557만명
사각지대 해소



한명한명 건강혜택
방방곳곳 복지혜택



보건복지부

감사합니다